



2024년부터

달라진 「농업경영체 등록제도」 안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(2024.2.17.) -

'24년 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·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과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

- ◆ **‘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**(법 제4조제3항)
 -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근거 미비점이 해소되었습니다.
- ◆ **‘증빙 자료’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 및 현장조사가 강화됩니다.**(법 제5조)
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농업인은 농지·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·통장 등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‘영농사실 확인서’ 등의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 요구가 가능합니다.
 - 제출한 증빙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거짓 또는 등록정보가 불일치 한 경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합니다.
- ◆ **농업경영정보의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**(법 제5조, 제6조)
 - 농업경영정보 정확도 검증을 위한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.(법 제5조의2)
 -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 정정·말소를 위한 세부요건이 아래와 같이 구체화 되었습니다.(법 제6조의2제1항)

<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(법 제6조의2제1항)>

구 분	정정 또는 말소 사유
현행 규정	① 거짓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(변경)한 경우
	② 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(3년)이 경과한 경우
	③ 주소, 소재지, 품목·면적 등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
신설 규정	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
	②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인 경우
	③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
	④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
	⑤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
	⑥ 관련 증빙자료 제출(30일 내)을 거부하는 경우

- ◆ **거짓·부정등록자 및 증명서류 거짓 확인·증명자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.**(법 제31조)

위반행위	현행	개정	관련규정
거짓·부정등록자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벌금 (500만원 이하)	법 제31조의2제2항
거짓·부정등록 확인·증명자	-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법 제33조제1항제2호

- ◆ **거짓·부정등록으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, 1년 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.**(법 제6조의2제4항)